



**2014**  
**1/21 (화)**

**The Four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 ‘아시아의 미래’



### 수린 핏수완

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전 ASEAN 사무총장

2009년 창설된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은 첫 회합 후 나라 현장을 채택했다. 나라 현장에는 회합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지식과 경험을 서로 교환하며, 깊은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적 발전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2009년은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한 해였다. 2008년 말에는 후쿠오카에서 한·중·일 정상 회담이 열려, 금융위기 속에서 동아시아를 지키기 위해 3국간 협력을 추진한다는 행동 계획이 발표됐다. 이는 2007년 필리핀 세부섬에서 열린 ASEAN+3 정상 회의에서 제시된 동아시아 각국이 협력·협조하여 통합을 추진해 나간다는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은 각국 지도자들의 그러한 요청에 대한 지역·시민 차원의 대답이라 할 수 있다.

국가와 국제 조직의 리더는 큰 비전을 제시한다. 그러나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지방정부의 리더이다.

지방정부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다. 사회보장, 인프라 정비, 학교 건설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지역 차원에서 전개할 때 비로소 큰 비전이 실현된다.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시대의 사회보장, 지역의 경제 진흥·고용 촉진, 지속 가능성의 양립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다.

나라는 이를 위해 지식을 교환하는 지방정부회합에 걸맞은 지역이다. 나라에는 역사와 문화, 문명을 축적해 온 실적이 있다. 그리고 훌륭한 리더인 아라이 지사가 있다. 아라이 지사는 구 운수성에서 경제, 산업, 무역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을 쌓고, 그 지식과 나라의 역사·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조합하여 구체적 활동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무역과 투자, 경제는 분명 중요하나, 문화 교류를 통한 지역 전체의 성장·발전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이 수장만의 회합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조직과 사업체, 풀뿌리 차원의 단체들이 참가하여 인적 교류 네트워크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동아시아라는 큰 우산 아래, 커뮤니티 속에서 모든 여성이 보호받고 모든 어린이가 미래를 이끌어 가는, 모든 사람이 안전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되길 바란다.

# 그룹 토의(수장)



## 테마 1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

<p>참가 지방정부</p>	<p>중국 : 산둥성 한국 : 경기도,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주시 일본 : 후쿠이현, 나가노현, 돗토리현, 나라현,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 나라현 덴리시, 나라현 가시하라시, 나라현 고세시</p>
<p>강 사</p>	<p>미야모토 타로 주오대학 법학부 교수 ----- 안상훈 서울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p>

## 강사 연설



### '새로운 협력 시스템 구상 곤궁화와 고령화를 넘어서'

**미야모토 타로** 주오대학 법학부 교수

저출산·고령화의 과제는 '지탱하는 측'의 문제와 '지탱받는 측'의 문제로 대별된다. '지탱하는 측'의 문제로서 합계특수출생률의 저하와 함께 심각한 것이 여성수의 감소이다. 일본의 20~34세 여성은 1995년 1,320만명에서 2012년에는 1,090만명까지 줄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8~2.9의 출생률이 필요하다.

현재 예정 아동 수가 희망 아동 수를 밑도는 이유로 60% 이상이 경제적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많은 지자체가 소아 의료비와 보육료 보조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첫 출산 때 여성의 60%가 직장을 그만둔다. 가시하라시에서는 질 높은

보육·취학 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보육원 일체화에 임하고 있다. 더욱이 현역 세대의 곤궁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저임금으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첫 직장이 비정규직인 경우 30대 전반 결혼 비율은 30%를 밑돈다. 현역 세대가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가정과 아이를 갖는 대전제가 되고 있는 점도 강조해 두고 싶다.

한편 '지탱받는 측'의 문제로서 고령자 비율 증가와 함께 독거화, 저소득화, 치매 등으로 지원이 곤란해 지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지탱하는 측'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는 특히 전기 고령자가 활약할 기회·장소 만들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때 청년 취업지원과 고령자 생활지원을 조합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빈집을 돌봄 서비스가 딸린 주택으로 이용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을 고령자 생활 지원직으로 고용하는 시책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누구나가 일하기 쉬운 사회를 만들면 여성과 고령자, 생활 곤궁자 등 '지탱받는 측'이던 사람들이 '지탱하는 측'으로 이동한다. 새로운 협력 형태와 전원 참가형 사회 만들기를 정부가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동아시아 모델이 될 것이다.



## ‘미래사회의 사회정책적 조명: 저출산과 고령화를 넘어서’

**안상훈** 서울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는 가부장적 노동시장의 해체와 퇴직 연령의 재고가 열쇠가 된다. 한국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으나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보다 낮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가부장적 노동시장이 계속되면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여성이 늘어나 저출산은 더욱 진행된다. 향후는 소득 재분배보다 남녀 간 ‘시간 재분배’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 워크 라이프 밸런스 지원의 중요성이 더해질 것이다.

2040년 생산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상황을 감안하면 젊은 세대의 생산성을 높여 부담 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건강수명이 늘어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도 가능하게 된다. 또 고령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생산성에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퇴직 연령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고령자 부양을 모두 의료로 충당하면 의료비 증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에서 개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개호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0% 미만의 저수준이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도 적다. 이유는 복지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성이 가정에서 개호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저해하고 출산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향후는 현금 복지를 통한 소득 보장과 복지서비스를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현금 복지는 GDP를 억제하나 서비스 복지는 오히려 실업률을 낮추고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서비스 복지 중심의 고용 복지 전략을 통해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여성과 건강 고령자를 노동 시장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적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프레젠테이션



### 한국/경기도 **LEE, Eul Jook** 여성가족국장

한국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요인 면에서는 현저히 낮은 청년층 고용률(24.2%)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이 미혼화·만혼화를 초래하고 있다. 환경적 요인 면에서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결혼·출산 후에 경력이 단절되는 M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 높은 사교육비도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저출산화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출산·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고령사회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반 조성, 성장 동력 확보와 분야별 제도 개선 등 3가지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화사업으로는 맞벌이 가정을 보육교사가 방문하는 가정보육 서비스 사업, 방과후 혼자 지내는 아동의 식사와 간식 제공 및 보충수업 등 맞벌이 부부가 일·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통해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 일본/나라현 **아라이 쇼고** 지사

나라현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를 억제하기 위해 ‘건강장수 나라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과 질병 후 기능 회복, 젊은 나이에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의료 제공, 자살 예방을 포함한 정신위생 유지가 필요하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통계를 활용한 과학적인 관찰과 평가에 근거한 시책이 필요하다. 나라 현민의 사망 요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암으로 그중 폐암 사망률이 높다. 현재 전국 최저 수준인 폐암 검진 수진율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 운동 습관자 비율이 낮으면 심장질환 사망률,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읍면별로 통계를 내어 결과를 알리고 계몽에 주력하고 있다.

건강장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식과 스포츠, 암 대책 등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의료의 중점을 CURE에서 CARE로 바꿔 질병 예방, 개호, 재활에 힘쓰도록 의료기관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는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이 지역에서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이다. 의료·개호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육성해 나가는 것도 과제라고 본다.



**일본/돗토리현** **하야시 아키오** 부지사

돗토리현은 충실한 육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육아왕국 돗토리’를 표방하고 ‘육아왕국 돗토리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 환경 정비 시책으로서 병아·병후아 보육 충실, 소아 의료비 조성 대상 확대, 결혼 활동 이벤트 조성, 남편 육아 프로젝트, 남녀 공동 참여 추진 기업에 대한 인정·표창 등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 밖에도 불임치료 조성, 올바른 성지식 계몽, 장애인 지원, 학대·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망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전국 10현의 젊은 지사를 중심으로 ‘육아 동맹’을 만들어 정부에 육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사회보장 서비스와 지역포괄 케어의 전 단계로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모두가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생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사랑 지원 운동’과 전국 최초의 ‘수화 언어 조례’ 제정에 힘쓰고, 금년도는 ‘공생’을 테마로 ‘전국 장애인 예술·문화제 돗토리 대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의 작품과 예술을 즐기고 장애를 이해·존중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



**일본/가시하라시** **모리시타 유타카** 시장

일본은 메이지 시대까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촌락 공동체가 정착되어 대가족을 기반으로 한 육아 기능이 지역에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 성장기에 노동 인구가 도시에 집중했다. 그 결과 핵가족화 진행과 대가족제 붕괴,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도시 보육원 수요가 증가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취업자의 약 4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나, 관리자 부문 비중은 눈에 띄게 낮다. 임신·출산을 계기로 일을 중단하는 여성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이 여성 등용을 막는 하나의 요인이다. 저출산화가 진행되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여성이 일하지 않는 손실을 줄여 여성이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에는 유치원과 보육원이 있다. 유치원은 교육하는 곳, 보육원은 보육하는 곳이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감소하고 보육원 대기 아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시하라시는 근린 시립 보육원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어린이집 조성에 힘쓰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폭넓은 연령의 아이들 및 지역 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풍요로운 생각과 행동을 비롯해 협조성, 감성이 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고세시** **히가시가와 유타카** 시장

일본에서는 전후 부흥기~고도 경제 성장기와 거품경제 붕괴 이후의 경제 시책을 통해 공공시설과 상하수도 등 인프라 자산이 집중 정비되었다. 이들 자산이 대량으로 갱신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 거액의 비용이 필요하다. 고세시의 경우 특히 공영주택 유지·수선비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와 부조비 등 세출 증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의 공적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공공 건축물 유지에서 기능 유지의 방향으로 공공서비스 자체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공적자산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 재고, 비용, 이용빈도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총론으로 총량 축소 폭을 결정하고 각론으로 통폐합, 장기 수명화, 재배치 계획 등을 논의한다. 인근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가능한 기능은 통합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육원과 공영주택의 합체, 육아 시설, 고령자 시설, 민간 상업시설의 복합화 등 공공시설의 재배치와 집약은 중심 시가지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에 기여하고 고령자 생활 편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다음 세대에 부담을 안기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대국적으로 공적 자산을 재검토하고 행정 운영에 힘쓰고 싶다.

**그룹 토의 참가자들**



**중국/산둥성**  
**SU, Daoyi**  
민정청·사회복지 및 자선사업  
촉진처장



**한국/부여군**  
**RHI, Ryong Woo**  
군수



**한국/전라남도**  
**KIM, Yang Soo**  
 사회복지과장



**한국/경주시**  
**JEONG, Kang Soo**  
 부시장



**일본/후쿠이현**  
**다케우치 나오토**  
 총무부기획관



**일본/나가노현**  
**시미즈 후카시**  
 건강복지참사



**일본/다자이후시**  
**히라시마 데쓰노부**  
 부시장



**일본/덴리시**  
**나미카와 겐**  
 시장



**나라현의회**  
**고이즈미 요네조**  
 후생위원회 위원장



**나라현의회**  
**야마모토 노부아키**  
 후생위원회 부위원장

